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단축 및 정예화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육군 현역 원사 김영배, 병 복무기간 '93년 9월~95년 5월(21개월, 병장)

1. 서 론

발제자는 지난 5년간의 육군 부사관 충원율 저조와 현 정부의 선택적 모병제 추진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시했다.

제시한 정책은 ①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을 48개월에 36개월로 단축, ② 장기복무 선발 제도를 '심의'를 통한 선발에서 '희망자 전원 장기 선발'로 조정, ③ 하사에서 중사 진급 기간을 '2년 복무시 전원 중사 진급'으로 조정 등 3개였다.

제언자의 주장의 핵심 내용은 ①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함에 따라 병 및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격차 조정을 통해 부사관 지원자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② 장기복무제도를 폐지하여 임관 시점부터 직업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③ 하사 2년 복무 후 중사 진급을 보장함으로써 이미 유입된 인원의 장기복무 선택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제언자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통해 제언자의 의견을 지지하고 한다.

2. 본 론

먼저, (사) 고등국방정책연구소에서 김종탁 외 4명(2021)이 연구한「육군 간부 복무제도 개선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21년 6월 15일~7월 15일까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971명과 현역병 1,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무형태를 선택하게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복무형태	계	장교	**부사관**	병	대체복무
인원(명)	940	84	**36**	657	163
비율(%)	100	8.9	**3.8**	70.0	17.3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940명 중 부사관 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인원은 36명(3.8%)으로 복무형태 중에서 가장 낮았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했을 경우 복무형태를 선택하게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복무형태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조정				
		2년	3년	4년(현재)	5년	6년
장교	인원(명)	131	104	96	98	105
	비율(%)	13.7	10.9	10.1	10.3	11.1
부사관	인원(명)	159	84	67	53	51
	비율(%)	**16.7**	**9.2**	**7.1**	**5.6**	**5.4**
병	인원(명)	532	615	633	628	621
	비율(%)	55.8	64.7	66.7	66.1	65.4
대체복무	인원(명)	131	144	153	171	173
	비율(%)	13.7	15.2	16.1	18.0	18.2
계	인원(명)	953	950	949	950	950
	비율(%)	100	100	100	100	100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특정시 16.7%, 3년으로 특정시 9.2%, 4년으로 특정시 7.1%, 5년으로 특정시 5.6%, 6년으로 특정시 5.4%였다.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사관 지원 의사가 있는 인원이 36명(3.8%)이었으나 기간을 특정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지원 의사가 증가했으며, 의무복무 기간이 줄어들수록 지원 의사는 크게 증가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장기복무선발률을 조정했을 경우 부사관 지원의향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사관 지원 여부	부사관 장기복무선발률 조정				
	75%(현재)	80%	85%	90%	95%
지원	130	134	159	192	2102
미지원	805	798	773	740	720
계(명)	935	932	932	932	932
지원율(%)	**13.9**	**14.4**	**17.1**	**20.6**	**22.7**

부사관 장기복무선발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의사를 표명한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군 현역병에게 부사관 지원의향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군복무기간	부사관 지원의향			계	선택률
	있다	없다	모르겠다	(명)	(%)
6개월 미만	24	329	55	408	5.9
7~12개월	33	406	89	528	6.3
13개월 이상	32	382	53	467	6.9
계	**89**	**1,117**	**197**	**1,403**	**6.3**

육군 현역병 중에서 6.3%는 부사관 지원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길수록 지원의향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현역병에게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했을 경우 부사관 지원의향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사관 지원여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조정				
	2년	3년	4년(현재)	5년	6년
지원(명)	443	174	92	52	58
미지원(명)	934	1,202	1,282	1,321	1,319
계(명)	1,377	1,376	1,374	1,373	1,319
지원선택률(%)	**32.2**	**12.3**	**6.7**	**3.8**	**4.2**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 32.2%, 3년으로 단축시 12.3%, 5년으로 연장시 3.8%, 6년으로 연장시 4.2%였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동일하게 의무복무 기간이 줄어들수록 지원 의사는 크게 증가했다.

육군 현역병에게 장기복무선발률을 조정했을 경우 부사관 지원의향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사관 지원 여부	부사관 장기복무선발률 조정			
	75%(현재)	80%	85%	90%
지원	152	165	238	364
미지원	1,225	1,212	1,138	1,012
계(명)	1,377	1,377	1,376	1,376
지원율(%)	**11.0**	**12.0**	**17.3**	**26.5**

부사관 장기복무선발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의사를 표명한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육군 현역병의 부사관 의무복기무간에 따른 부사관 선택의향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조정				
		2년	**3년**	4년(현재)	5년	6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지원	**16.7%**	**9.2%**	7.1%	5.6%	5.4%
	육군 지원	**8.8%**	**4.8%**	3.7%	2.9%	2.8%
육군 현역병의 육군 부사관 지원		**32.2%**	**12.6%**	6.7%	3.8%	4.2%

부사관 의무복기간 단축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보다 육군 현역병의 부사관 지원의향이 더 높았다. 의무복무기간 연장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보다 육군 현역병의 부사관 미지원 의향이 더 높았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육군 현역병의 부사관 장기선발률에 따른 부사관 선

택의향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사관 지원 여부		부사관 장기복무선발률 조정				
		75%(현재)	80%	85%	90%	95%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지원	130	134	159	192	2102
	미지원	805	798	773	740	720
	계(명)	935	932	932	932	932
	지원율(%)	**13.9**	**14.4**	**17.1**	**20.6**	**22.7**
육군 현역병	지원	152	165	238	364	
	미지원	1,225	1,212	1,138	1,012	
	계(명)	1,377	1,377	1,376	1,376	
	지원율(%)	**11.0**	**12.0**	**17.3**	**26.5**	

장기복무선발률이 증가함에 따라 현역판정검사 대상자들보다 육군 현역병의 부사관 지원의향이 더 높았다.

위 연구에서는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단축과 장기복선발률 상향조정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육군 현역병 모두에게 부사관 지원의향을 높이지만, 육군 현역병에게 더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 내용에 추가하여 계급체계를 현재 4계급에서 5계급으로 조정하고, 부사관의 연령정년을 연장할 것을 제언했다.

다음으로, 육군부사관학교 부사관제도/역량강화연구센터에서 조만덕 외 3명(2025)이 연구한「미래 부사관 급여 적정 수준 연구 및 획득률 제고를 위한 부사관 모집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25년 3월 ~ 2025년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25년 8월 훈련병 2,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2년 전투부사관(병 목부 대체) 제도 신설시 지원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설문조사는 3개 조건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응답현황을 조사했다.

가장 먼저, 훈련병에게 부사관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계		지원의사 있음		지원의사 없음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내용	2,350	100.0	70	3.0	2,280	97.0

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인원은 70명(3.0%)로 2021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3.8%보다 낮았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후 지원 의사를 조사했다.

① 병 복묵기간은 18개월이다. ② 2년 전투부사관은 양성과정 6개월(병장

급여)을 통해 임관한 후 하사로서 18개월(하사 급여, 세전 3,200만원) 동안 복무해야 한다. ③ 4년 단기부사관은 현행 제도(급여, 진급, 장기복무 등)를 유지한다. ④ 2년 단기복무 후 개인 희망시 심의를 통해 4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원의사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초기 기준값		2년 단기복무 전투부사관 도입		증감	
	응답자(명)	백분율(%)	응답자(명)	백분율(%)	응답자(명)	증감율(%)
표본수(N)	2,350	100.0	2,350	100.0	-	-
미지원	2,280	97.0	2,022	86.0	-258	-11.3
2년 전투부사관	-	-	308	13.1	+308	
4년 단기부사관	70	3.0	20	0.9	-50	-71.4

2년 전투부사관 복무제도 도입 시 부사관 유인율은 11.3% 증가했다. 하지만 4년 일반부사관 지원자는 70명에서 20명으로 71.4% 감소했다. 2년 전투부사관 제도가 도입되면 2년 전투부사관에 지원할 인원은 증가하지만 4년 단기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복무제도 조건을 변경하여 4년 단기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제도를 현재의 '심의를 통한 일정 인원 선발'에서 '본인 희망시 심의 없이 장기복무자로 확정'으로 변경시 지원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복무제도 조건1		복무제도 조건2		증감	
	응답자(명)	백분율(%)	응답자(명)	백분율(%)	응답자(명)	증감율(%)
표본수(N)	2,350	100.0	2,350	100.0	2,280	-
미지원	2,022	86.0	1,990	84.7	-32	-1.4
2년 전투부사관	308	13.1	256	10.9	-52	-2.3
4년 단기부사관	20	0.9	104	4.4	+84	+3.7

복무제도 조건 1에서 미지원자 2,022명 중 32명이 4년 단기부사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2년 전투부사관 지원자 308명 중 52명이 4년 단기부사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4년 단기부사관 지원자 20명은 전원 4년 단기부사관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4년 단기부사관의 장기복무제도를 할당된 공석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 중 심의를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지원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복무자로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에 4년 단기부사관의 유입 효과는 크지만 2년 전투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4년 단기부사관이 희망한다면 심의 없이 장기복무로 확정되지만, 2년 전투부사관에서 4년 단기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경우(2년 전투

부사관은 2년 복무 후 전역, 4년 단기부사관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재입대)에 지원의향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복무제도 조건2		복무제도 조건3		증감	
	응답자(명)	백분율(%)	응답자(명)	백분율(%)	응답자(명)	증감율(%)
표본수(N)	2,350	100.0	2,350	100.0	2,280	-
미지원	1,990	84.7	2,068	88.0	+78	+3.3
2년 전투부사관	256	10.9	156	6.64	-100	-4.4
4년 단기부사관	104	4.4	126	5.36	+22	+1.0

조건2에서 부사관에 지원할 의사가 없었던 1,990명은 계속해서 지원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2년 전투부사관 지원자 256명 중에서 78명은 병생활을 선택했고, 22명은 4년 단기부사관을 선택했으며, 156명은 계속해서 2년 전투부사관을 선택했다. 4년 단기부사관 지원자 104명은 계속해서 4년 단기부사관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2년 전투부사관에서 4년 단기부사관으로 연계를 차단하면 2년 전투부사관 지원자 중에서 30.5%가 병생활을 선택하고 8.6%가 4년 단기부사관으로 진로를 변경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초 지원의사와 복무제도 조건별 부사관 지원의사 확률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잠재적 지원자 N명에 대한 지원의사 확률		
		조건 #1	조건 #2	조건 #3
복무제도 조건	4년 일반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방식	심의 후 선발	희망시 전원 선발	
	2년→4년 복무 연계성	연계 가능	연계 가능	연계 불가
유형별 선택확률	병 복무	86.04%	84.68%	88.00%
	2년 전투부사관	13.11%	10.89%	6.64%
	4년 단기부사관	0.85%	4.43%	5.36%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2년 전투부사관 제도를 도입할 경우 4년 단기부사관 지원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2년 전투부사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장기복무 선발제도를 개인 희망시 장기확정으로 변경하면 4년 단기부사관 선택율을 지금보다 5.73배 증가할 것이다. 만약, 2년 전투부사관에서 4년 단기부사관으로 연계제도를 폐지한다면 4년 일반부사관 선택율은 6.32배 증가하지만 2년 전투부사관 선택율은 0.5배 감소할 것이다.

또한, 위 내용에 추가하여 하사의 연봉이 2025년 기준 세전 3,200만원에서 3,500만원, 3,900만원, 4,400만원, 4,900만원, 5,400만원으로 증액되었을 경우 부사관 지원자가 증가함을 증명해서 제시했다.

3. 결　론

2026년 육군은「부사관 종합발전 4.0」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언자가 제시한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기간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단계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부사관 계급체계를 4계급에서 5개급으로 조정, 부사관 연령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현역 부사관의 한 명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제언자가 제시한 의무복무기간 단축, 중사 진급시기 단축, 장기복무제도 개선은 결국 계급구조 조정, 연령정년 연장, 선택적 복무제도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위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남은 것은 정책결정권자의 선택일 것이다.

군대는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적을 가정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군대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교활한 적을 가정하고,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과 싸우는 전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이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기를 희망한다.

제언자가 제시한 내용은 부사관이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육군과 국방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만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히 바란다.